우암학원 창학 70주년
남부대학교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기업이 원하던 자리 지식산업센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분양중 062)372-6666 시공 삼일건설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458호 1판 | 1952년 4월 20일 창사 | 69 | 2021년 3월 5일 금요일 | 음력 1월 22일 | kwangju.co.kr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 1년 앞 대선 구도 '출렁'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전제 중수청 설치 반대 … 제 역할 여기까지"
차기 대권 행보 나설 듯 … 여 "기획 사퇴" 비난·야 "야권 결집" 기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윤 총장의 전격적 사퇴는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선과 1년 뒤의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설치에 반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최근 이례적으로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여당의 중수청 입법 추진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1시간여만에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2년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물러나게 됐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뒤 취임한 22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검찰 수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수리를 위한 행정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윤 총장의 태도로 미뤄 사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총장이 정계진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차기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국민들의 인식도 문 대통령이 사의 수용 결정을 앞당긴 배경으로 꼽힌다.

정치권은 윤 총장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강력한 부인도 하지 않아 사실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 총장의 사퇴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권에는 악재가, 야권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개혁을 두고 여권과의 갈등 구도 속에서 야권 대권주자 이미지를 쌓아온 윤 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권견제론'에 구심점 역할을 하며 4월 재보궐 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 판도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여권은 윤 총장의 사퇴에 대해 '기획 사퇴', '사퇴 쇼', '정치 검찰'이라며 맹비난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 총장 옹호 발언을 이어가며 야권의 결집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정치권에선 윤 총장이 당분간 말을 아끼며 정치와는 거리두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정치적 욕심에 의해 총장직을 던졌다'는 후폭풍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 인사들과 물 밑에서 만나 세력 규합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권의 무리한 검찰 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며 정치적 기반과 영향력을 키워나가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의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LH 투기 의혹 발본색원하라"

강도 높은 조사 추가 지시
"AZ 백신 기꺼이 접종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강도 높은 추가 지시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강조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과 국토교통부의 합동조사는 고강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거론된 데 대해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의료진이 접종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필수적 공무 등 긴급출국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백신 종류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 만큼 문 대통령 역시 종류를 가리지 않고서 접종을 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이런 방침을 미리 밝힌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접종 시기와 관련해선 6월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8주 간격으로 두 차례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1차 접종은 늦어도 4월 초순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병원급 이상 의료시설도 코로나 백신 접종

광주·전남 약 2만3000명 수준 … 오늘 도착, 내일부터 시작

광주와 전남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시설에 대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6일부터 시작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에 이은 백신 접종으로 대상자는 2만3000명 수준이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접종 대상자는 입원환자 566명, 종사자 1만2524명 등 1만3090명이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다. 접종 동의율은 94.4%로 나타났다.

접종 대상은 중증 환자가 주로 찾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65세 미만 보건 의료인이다. 폐쇄병동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은 종사자는 물론 입원 환자도 포함됐다.

전남지역 접종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시설 23곳, 병원급 의료시설 78곳 등 101곳에서 이뤄진다.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영양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이다. 대상자 1만1522명 가운데 90.2%에 해당하는 1만400명이 접종에 동의했다.

오는 5일 백신이 접종 대상 의료시설로 배송된다. 시설별 준비 상황에 따라 6일부터 자체 접종을 시작해 5월 중순까지 마치는 일정이다.

지난달 26부터 시작된 요양병원·요양시설, 코로나 19 전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은 광주의 경우 대상자 1만1365명 가운데 8554명(75.3%)이 접종을 마쳤다. 전남에서는 대상자 1만8687명 가운데 1만137명(54.2%)이 접종했다. 이상 반응 신고는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18건, 33건 신고됐지만, 발열이나 알레르기 등 모두 경증이라고 방역당국은 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